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관 구성

	서기석 (61)	안창호 (57)	이진성 (58)	이정미 (52)	박한철 소장 (61)	김이수 (61)	김창종 (57)	강일원 (55)	조용호 (59)
출신학교	경남고,서울대	대전고,서울대	경기고,서울대	마산여고,고려대	제물포고,서울대	전남고,서울대	영신고,경북대	용산고,서울대	중앙고,건국대
전직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고검장	광주고법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검장, 김앤장 변호사	사법연수원장	대구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원장
연수원 기수	11기	14기	10기	16기	13기	9기	12기	14기	10기
지명주체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양승태 대법원장	이용훈 전대법원장	이명박 대통령	민주통합당	양승태 대법원장	여야 합의	박근혜 대통령
판단	인용	인용	인용	인용	인용	기각	인용	인용	인용

연합뉴스

진보세력 급속 약화…양당제 더욱 고착화

■ 통진당 해산…정치권 변화

신당 창당 등 야권 재편
진보정치 급변 가능성도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해산 결정은 정치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제 2야당의 공준분해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양당 체제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진보세력으로 정의당이 남아 있긴 하나 그 세력이 더욱 미미해져서 정치권에서 큰 의미를 찾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새정치연합은 이념 면에서 중도 쪽으로 클릭 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통진당 해산 결정 전에도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마지못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어진 진보정치 세력은 말 그대로 급변기를 맞게 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해 19일 발표한 조사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통진당과 정의당은 나란히 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해산 선고로 통진당 지지층 상당수가 정의당으로 흡수되면서 진보정치의 흐름은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보정치의 주요 이슈도 통진당이 집중하던 통일·외교에서 정의당이 중시하는 노동·복지로 급격히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부에서는 두 당이 과거 분당사태로 극심한 갈등을 보였던 만큼, 통진당 지지층이 부동층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진보정치 실험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지지자들은 새정치연합 등 거대 정당의 지지층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신당 창당을 포함한 야권재편 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마침 시민사회 진보 인사들이 '국민모임'을 결성해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이를 중심으로 신당이 생긴다면 통진당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점도 변수다. 당권을 잡지 못한 새정치연합 인사들이 뛰쳐나오면 신당 창당 움직임이 더 활발해 질 수 있다.

신당 건설이 아닌 '대통합'을 통한 야권 재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진보정당의 독자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통진당 측 인사들은 물론 진보정당들을 모두 새정치연합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야권 재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신당을 추진해 온 대다수 인사들이 통진당을 배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진보당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합론 역시 새정치연합이 '야권연대 원죄론' 후 진보당과 선 긋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통진당 해산…정치권 반응

朴대통령 "민주주의 지켜낸 역사적 결정"
이정희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됐다"
새누리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
새정치 "정당의 자유 훼손…심히 우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선고와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는 한편, 통진당 해산이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헌재의 당 해산 결정에 대해 지난 19일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분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 박근혜 정권이 진보당을 해산시켰지만, 우리 마음속에 키워온 진보정치는 끝까지 해산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같은 날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는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두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한 자기부정 판결"이라며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과 관련,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대신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청와대 입장을 대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헌재 납득할만한 대답해야"
새누리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거냐"

여야, '통진당 의원직 박탈' 공방

여야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지역구 의원직 박탈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와 법원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 결정을 내리고 판결해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의 이러한 지적은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헌재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 한다면 헌재의 '자기부정' 아닌가"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헌재는 자기 결정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정당 해산 선고를 내릴 때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판단해줄 것을 청구한 데다 충분히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줄 알았는데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 베니스위원회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 요청

세계 헌법재판기관의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헌법재판소 측에 요청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번역하는 대로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했다. 아울러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이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 측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아닌 구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주요 결정을 선정해서 영문 판례집을 내는데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올해 영문 판례집에 넣을지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며 "베니스위원회가 공식 요청할 경우 이번 결정문만 먼저 번역해 전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9월 강일원 재판관은 이와 관련, "베니스위원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유럽과 터키의 선례 등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정당해산심판에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오늘 1박2일 일정 전남 방문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로 나설 문재인 의원이 22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남을 방문한다.

문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목포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낙연 전남지사 및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등을 만난다.

새정치연합 의원 30명이 문 의원을 비롯한 박지원·정세균 의원 등 이른바 '빅3'의 전대 불출마를 호소하는 등 불출마 압박이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문 의원의 이번 전남 방문에 지역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오후와 23일 전체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일정도 있다"고 말했다. 방문 직전까지 누구를 만나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거나 비공개로 해야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의미다. 문 의원이 전남에서 당 대표 출마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골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